

문화도시 조성 종합계획 광주 공청회

# “미술관·공연장 문화전당내 시설 활용”

## 전당내 주차장 100대 규모 축소 난색 인프라 구축사업 국가 주도 방안 검토

문광부가 2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안)' 광주공청회에서 문화전당 랜드마크를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광부가 지역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해 내놓은 질서안인 만큼 지역에서도 예전과 같은 거센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랜드마크를 보완할 상징물의 내용이나 규모 및 위치 등을 놓고 지역 각계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또 다른 논쟁이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전당 랜드마크 논란은 지난 2005년 말 국제공모를 통해 유우승씨의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후 2년 8개월 동안 계속돼왔다.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은 시민공원이 극대화된 지하위주의 설계가 친환경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찬성한 반면 광주시와 동구 주민 등은 랜드마크 기능이 전혀 없어 도심활성화를 물론 국제적인 건물로서 문제가 있다며 지상화 설계를 요구해왔다.

심지어 박광태 광주시장은 올 초 신년기자 회견에서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종합계획에 찬성할 수 없으며,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다음 정권에서 진행돼도 관계없다는 경경한 입장을 보여 이까지 했다.

또한 광주 동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랜드마크 보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문광부는 광주시와 지역 예술계가 요구해 온 문화전당 내 국립현대미술관 및 전문

공연장 건립 요구와 관련,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즉 미술관·공연장은 전당 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연장은 향후 용역을 통해 광주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문화전당 내 600대 규모의 주차장을 100대 정도로 줄여 공원기능을 확대하고, 도심활성화 및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시민단체와 동구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600대 규모는 필수적인 면적이라며 일축했다.

또 도심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가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단장은 “민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주민들도 민

자사업을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자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전당 내 5·18민중항쟁 관련 시설을 대폭 늘려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광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홍보를 위해 문화전당 내에 아시아문화제탑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안 발표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 4조9천억원이 투입되며, 경제효과(2008년~2023년)는 생산유발 4조 861억원·고용창출 6만5천509명으로 제시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한 광주공청회가 2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문광부와 광주시, 광주지역 각계 인사 및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바다 싸움’ 여수박람회 반대운동 비화 하나

## 남해지역 어민들 “육성수면 해제 안되면 실력행사”

전남도와 경남도의 ‘바다 싸움’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반대운동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 여수시 남면 금오도 주변 해역에 대한 ‘육성수면’ 지정에 대해 심하게 반발해온 경남 남해지역 어민들이 육성수면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여수세계박람회 반대운동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육성수면 지정해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철·남해어촌계장 협의회장)는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내달 5일까지

육성수면을 해제하지 않으면 육·해상시위는 물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반대서명운동 등 결사항쟁으로 경남어선의 조업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어민들은 전남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해상경계는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관할권을 주장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전남도는 경남도가 최근 육성수면 주변 6천ha를 수산물을 시범 양식하고 수확할 수 있는 ‘연구·교습어업 실시해역’으로 공고한 데 대해 경남도에 취소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교습어업 실시공고와 관련, 해양수산부에도 취소를 요청하고 여수해양경찰서에 지도·단속을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는 2005년 2월 7일자로 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여수시 남면 금오도 주변 해역 2천816ha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했으며 경남도는 이에 맞서 최근 육성수면 주변 해역 6천ha를 ‘연구·교습어업 실시 해역’으로 공고, 양 지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육성수면은 해양부 장관 승인을 받아도 지사가 지정토록 돼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선관위 등록 대선 예비후보 100명 넘어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대선 예비후보자가 22일 100명을 돌파했다. 지난 4월2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유재건 의원이 100번째와 101번째로 나란히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면서 “중도에 사망하거나 사퇴한 사람을 포함하면 모두 106명”이라고 밝혔다.

정당별로 볼 때 경선이 끝난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유일하게 남았다. 민주신당 후보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손학규 전 경기지사, 김두관 전 행정부장관, 추미애 전 의원 등 14명으로 가장 많다. /연행뉴스

## 민주신당 대선 후보 11명 등록 마쳐

대통합 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총 11명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고수를 선언했던 김혁규 전 의원과 김원웅 의원, 강문태 전 장관은 민주신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2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전정배 의원, 한명숙 의원, 이해찬 의원, 유시민 의원, 신기남 의원, 유재건의 감 결과, 총 11명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고수를 선언했던 김혁규 전 의원과 김원웅 의원, 강문태 전 장관은 민주신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찬, 한명숙, 신기남, 유시민 의원 등은 선거인단 대리접수 등을 둘러싸고 반발을 거듭한 끝에 이날 오후 늦게 등록을 마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저도 가스할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껍질 다 소화시켜주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할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부채표 가스할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채표 가스할명수!**

부채표가 없으면 할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할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스락, 고추냉기, 케피, 육두구, 현호석, 정향, 참숯,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할명수